

오만한 일본, 불안한 제국

다이쇼 시대(1912~1926) 일본의
국가정체성 변화와 대외정책*

한정선

1. 머리말

근대 일본에서 다이쇼(大正)는 요시히토(嘉仁) 천황의 연호로 그의 재위기간인 1912년부터 1926년의 시기를 지칭한다. 이 기간은 세계사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과도 겹치기 때문에 전간기(戰間期)로 지칭되기도 한다. 또한 이 시기 일본에서는 안으로는 정당정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민주주의 또는 ‘민본주의’가 실험되었고, 밖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면서 중국과 태평양 지역으로 제국

한정선(韓程善)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근현대 일본의 사상사, 문화사 전공. 국문 저서로는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공저, 일조각, 2006)가 있다. 이 저서는 200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일본어로 번역되어 『漫画に描かれた日本帝国』(明石書店)으로 출판되었다. 영문 저서로는 *An Imperial Path to Moder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가 있다. 최근에는 현대 일본의 전쟁유적 보존운동을 통해 기억과 역사의 문제를 고찰하면서, “Relics of Empire Underground(2016),” “The Heritage of Resentment and Shame in Postwar Japan(2017)”을 발표하였고, 그 외 국문 및 영문 논문 다수가 있다.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https://doi.org/10.29154/ILBI.2019.20.248>

주의를 확산시켰다.¹ 그러나 “안으로는 민본주의 밖으로는 제국주의”라는 시대적 특징은 후세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동시대인은 다이쇼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1927년 일본 최초로 ‘국제정치’라는 강의를 와세다대학에 개설한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는 다이쇼 시대를 “메이지의 성세 40년 동안에 안으로 배양되고 충실해진 우리의 위대한 국력을, 다이쇼의 빛으로 15년간 밖으로 팽창하고 발전”하는 “국위 향상”의 시기로 규정짓고 있다. 그는 이어서, “당시 국위 향상이 가능했던 것은 세계적 시운(時運)의 혜택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며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전후 국제정세의 변화가 일본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을 지적했다.²

시노부는 다이쇼 15년을 세 시기로 나누었다. 1912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 말기 무렵까지의 1919년을 전후한 시기가 제1기로서 “패도주의가 왕성한 시기”였다. 시노부는 패도주의를 영어 ‘imperialism’의 번역어로 사용하고 있다. 제2기는 대략 1919년부터 이후 6, 7년간으로서 이 시기를 “대세 순응적 협조주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노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대세순응적 협조주의는 주로 유럽과 미국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이고, 이웃 중국에 대해서는 패도주의 색채가 여전히 농후했다고 말하는 것이 지당하다.” 이어서, 그는 제3기를 1926년 중국관세회의를 전후한 아주 짧은 기간으로서, “소위 자주적 외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협조파괴주의” 또는 “독립독보주의”가 왕성했던 시기로 지적하고 있다.³

본 논문은 동시대인 시노부의 다이쇼 시대 일본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패도주의’에서 ‘협조주의’로 그리고 ‘독립독보주의’로 시기별

1 이와 같은 후세의 평가로 대표적인 것이 松尾尊兌, 『大正デモクラシー』, 岩波書店, 1974.

2 信夫淳平, 『大正外交十五年史』, 研文社, 1927, 1쪽과 9쪽. 시노부는 1894년 도쿄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외무성에 들어가 경성, 관동 총독부, 오스트리아 등에서 직업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1917년 외무성을 사직한 후 와세다대학에서 강좌를 맡았다. 또한 외교 전문 매체인 『外交時報』를 통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시노부에 관해서는, 사카이 데쓰야, 장인성 옮김, 『근대 일본의 국제질서』, 연암서가, 2010, 2장 참조. 사카이는 시노부의 “기본적인 준거 기준은 일단 세력 균형과 국익 계산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126쪽). 『外交時報』는 외교전문 매체로서 1920년대에는 수상을 비롯한 전, 현직 외교가의 글들이 게재된, 외교문제와 관련해서는 영향력 있는 매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伊藤信哉 編, 『外交時報: 總日次, 執筆索引-戦前編』, 日本圖書センター, 2008 참조.

3 信夫淳平, 『大正外交十五年史』, 2쪽.

일본의 대외정책 기조에 나타나는 변화를 고찰하면서, 변화 요인을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상유지적 또는 협조주의적 현실주의와 아시아주의적 현실주의가 경쟁, 타협, 상호침투하면서 일본 대외정책에 발생한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2. 협력적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패도주의 대외정책, 1915~1919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근대 일본의 대외정책은 주어진 국제정세, 또는 시노부가 지적한 것처럼 “세계적 시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즉 기존의 국제질서에 기회주의적으로, 현실주의적으로 반응하면서 일본의 대외정책은 자국의 독립과 안보만을 추구하면서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근대 일본의 대외정책을 “무사상(無思想)의 외교”라고 규정할 수 있다.⁴ ‘무사상의 외교’로 19세기 말에 아시아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열강의 상호관계가 협력적 제국주의(co-operative imperialism)를 규범으로 동아시아에서 현상유지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발 서구 제국주의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도모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문호개방주의’를 요구하면서 특정 국가가 중국에서 배타적인 이권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유통상주의 제국주의”(free-trade imperialism)를 작동시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혜국조항”(most-favored nation clause)을 통해 특정 국가가 중국에서 획득한 권익을 열강들끼리 나누는 “개항장 조약체제”(treaty-port system)를 조성하였다. 즉 열강 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여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 위기를 최소화하는 데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협력한 것이다.⁵ 동아시아에서 현상유지적 국제정세는 일본이

4 入江昭, 『日本の外交: 明治維新から現代まで』, 中公新書, 1966, 27쪽.

5 W. G. Beasley, *Japanese Imperialism, 1894~194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16~17. 정영진 옮김, 『일본제국주의 1894~1945』,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2013 참조. “자유통상주의 제국주의”에 관해서는 J. Gallagher & R. Robinson,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6 No. 1, Aug. 1953 참조.

중국에서 협력적 제국주의 규범을 어기지 않는 한 자국의 안보와 이권 확보를 위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협력적 제국주의 체제의 조건과 기회를 활용하면서 제국주의 경쟁에서 후발 주자였던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대만과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아시아의 신흥 제국으로 성장하였다.

후발 제국주의국가 일본은 비기독교 문화권에 기원을 둔 유일한 유색인종 제국이었다. 19세기 말에 서구사회에서 나타난 ‘황화론’(Yellow Peril)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국제관계는 인종주의가 제국주의의 저류를 이루고 있었다. 황화론은 청일전쟁 말기 경에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주창한 것으로서, 유럽문명을 황인종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유럽인의 단합을 제안하면서 나타났다. 황화론은 유럽 열강 간의 합종연횡과 권력정치 속에서 독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었고, 1895년의 삼국간섭에 독일이 참여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도 하다.⁶ 빌헬름 2세는 자신의 황화론을 선전하기 위해 헤르만 크넵퍼스(Hermann Knackfuss)에게 그의 황화론을 시각화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복사본은 열강의 권력가, 정치가에게 배포하기도 했다.⁷ 황화론은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독일의 주도로 서구 언론에 다시 등장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일본과 독일의 관계를 냉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05년 『도쿄팩』(東京パック)은 8월호 표지로 황화론을 다루었다.⁸

20세기 초 국제여론에 등장한 황화론은 ‘국위 상승’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일본에서 서구 열강으로 구성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고립될 수

6 이하 황화론과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는, Iikura Akira, “The ‘Yellow Peril’ and its Influence on German-Japanese Relations,” in Christian W. Spang and Rolf-Harald Wippichi eds., *Japanese-German Relations, 1895-1945: War, Diplomacy, and Public Opinion*, London: Routledge, 2006 참조.

7 황화론 그림의 존재를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무쓰 무네미쓰 등도 1895년 말 또는 1896년 초경에는 알게 되었고, 1896년 3월에는 복사본을 실제로 보았으며 이를 메이지천황에게도 보여주었다. Iikura Akira, “The ‘Yellow Peril’ and its Influence on German-Japanese Relations”, p.85.

8 『도쿄팩』은 기타자와 라쿠텐(北沢楽天)이 1905년 창간한 대형 컬러판 시사만화잡지이다. 근대 일본의 시사만화저널리즘에 관해서는, 한상일·한정선,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조선병탄과 시선의 정치』, 일조각, 2006 참조.



〈그림 1〉『東京パック』(1905. 8. 15)

「露帝苦し紛れに黄禍を画いて
列国を動かさんとす、これがほんとのザイル智慧」
“곤경에 빠진 러시아 황제는 황화론 그림으로
열국을 움직이려고 한다. 이것이 짜르의 지혜”

도 있다는 불안감이 조장되는 데도 기여하였다. 일례로,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당시 외무대신 하야시 다다스(林董, 1850~1913)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국의 현재 지위는 당국자가 가장 우려해야 할 바이다 … 세계의 대세는 거의 일본을 고립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⁹

이러한 인식은 외교 정책 입안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메이 지시기 언론계를 주도했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는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국제사회에서 ‘일등국’ 일본이 느끼는 고립감을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러시아가 우리 앞에 있고 미국이 [우리] 뒤에 있다. 옆에는 끊임없는 혼란에 빠져 있는 중국(支那)이 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쟁취한 일등국(一等國)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은 안으로는 무거운 세금을 감내하고 있다. 밖으로는 국채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군사비용으로 정화(正貨) 10억 엔을 지출

9 入江昭, 『日本の外交: 明治維新から現代まで』, 中公新書, 1966, 9쪽에서 재인용. 이성환 옮김, 『日本の外交』, 푸른산, 1993 참조.

하고 있다. 여기에 무역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까지 추가하면, 매년 10억 5천 엔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세계는 일본을 강대국으로 존중하기에 앞서 심지어 우리의 벼룩조차 의심과 질투의 눈길을 받고 있다. 국내외의 힘에 농락당하며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되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¹⁰

황색인종 ‘일등국’ 일본의 고립감 또는 불안감을 배양시키는 또 다른 사건은 일본인 이민자들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다.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일본인 이민배척 운동이 전개되었고, 1906년에는 샌프란시스코시 교육위원회에서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아동을 공립학교에서 격리하기로 결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08년에는 미일신사협정을 체결하여 이민노동자를 500명으로 제한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1913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인 이민 관련 사건은 “세계 속 일본의 정체성 문제와 얽히면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¹¹ 일례로, 아동격리사건에 직면한 당시 주미대사였던 아오키 슈조(青木周藏)는 외무대신 하야시에게 “아동격리사건은 그 이면에 있는 극히 어렵고 고루한 인종적 차별과 연계된”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¹²

현상유지적 제국주의 규범에 대한 불만과 유색인종 제국으로서의 불안이 뒤엉키면서 근대 일본사회에서 형성된 것이 ‘아시아주의’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유신 이래 다양한 시각에서 주장된 아시아주의는 서구 열강 중심의 협력적 제국주의에 반응하면서 형성된 일본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일본을 아시아의 맹주로 설정하여 아시아의 연대를 도모함으로써 서구 열강에 저항하려는 사상적 조류이자 근대 일본의 정치사를 관통하는 강력한

10 徳富蘇峰, 『時務一家言』, 民友社, 1913년, 288쪽.

11 高橋勝浩, 「日露戦争後の日米関係と移民問題: 海軍建艦競争の道程」, 『國際政治』 128, 2001년 10월, 178쪽.

12 高橋勝浩, 「日露戦争後の日米関係と移民問題: 海軍建艦競争の道程」, 180쪽에서 재인용.

힘이기도 했다.¹³ 근대 일본 외교의 원류를 “무사상의 외교”로 분석한 이리에 아키라는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의 『삼취인경론문답』(三醉人經論問答)에 나오는 “동양호걸군”(東洋豪傑君)을 인용하면서, 민간에서 형성된 뿌리 깊은 “아시아주의”를 일본 외교의 “이상주의”로 설정하고, 현실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정부의 외교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¹⁴ 그러나 “처음부터 아시아주의가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이거나 철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일본의 위기 극복과 독립 보존이라는 자기중심적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상기하면,¹⁵ 아시아주의는 민간에서 형성된 ‘무사상’의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의 또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상유지적 현실주의와 아시아주의적 현실주의 사이에는 협력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다이쇼 시대 일본의 대외정책은 정부의 현상유지적 현실주의 정책과 민간의 아시아주의적 현실주의가 서로 경쟁, 협력하면서 형성되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당시 일본의 안보와 이권에 직결된 중국문제였다. 다이쇼기 대외정책의 특징은 민간의 아시아주의가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투영되면서 현상유지적, 협력적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정책으로 이어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인용한 시노부의 패도주의는 현상유지적, 협력적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일본외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가지 요인이 이러한 정책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첫째는 유럽에서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럽 열강은 중국과 아시아에서 일시 후퇴하였다. 아시아에서 형성된 힘의 공백이라는 기회를 포착하여 일본은 협력적 제국주의 규범을 어기고 보다 공격적으로 중국에서 배타적 이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21개조 요구’로 표출되었다. 영

13 E. H. Norman, “The Genyosha: A Study in the Origins of Japanese Imperialism,” *Pacific Affairs*, Vol. 17, No. 3, September 1944, pp. 264~284; 한상일, 「아시아 連帶主義의 실상」, 『日本軍國主義의 형성과정』, 한길사, 1982, 45~61쪽 참조.

14 入江昭, 『日本の外交』, 41~47쪽.

15 한상일, 「일본의 우익사상과 아시아주의」, 『일본비평』 10호, 2014, 27~28쪽.

국의 동맹국으로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은 산둥 지역의 독일 조차지와 태평양의 독일령 섬들을 확보했다. 일본은 전시에 획득한 제국주의적 소득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과 일련의 불평등 협상을 시작했다. 당시 오쿠마 시게노부 내각(1914~1916)은 ‘21개조 요구’를 통해 만주와 내몽고 지역에서도 경제적 이권을 확충하여, 만주를 거의 ‘보호국’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 외 지역에서는 협력적 제국주의의 틀 속에서 일본의 이권을 최대화하는 데 주력하였고, 산둥에서의 기존 독일 이권을 일본에 이양시키는 데 집중하였다. 나아가 ‘그룹 5’라고 지칭되는 요구항목에서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인을 정치, 재정, 군사 고문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내정 간섭을 도모했다. 마침내 1915년 중국의 위안스카이(袁世凱) 정부는 ‘그룹 5’를 제외한 일본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게 되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21개조 요구’는 서구 열강의 협력적 제국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않았지만 만주 지역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고, 협력주의에 대한 일방적인 도전으로 인식되면서 서구 열강,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 강국으로 부상하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일본의 ‘21개조 요구’는 청 왕조를 타도하고 국권회복을 추구하는 중국 민족주의의 반발을 가져왔다. 그러나 당시 쑨원(孫文)으로 대표되는 중국 민족주의 세력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밀려나 있었으며, 북쪽에는 군벌들이 세력 다툼을 하는 분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중국 대륙의 내전 상황이 일본에서 아시아주의에 기반한 대외정책이 확장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을 제공하였다. 1911년 청 왕조를 타도한 신해혁명은 2,000년 이상 중국에서 지속된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제를 실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에서의 정치 변혁은 일본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¹⁶ 일본 정계의 원로이자 군부의 실력자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중국에서의 혁명은 일본 국정의 근본 방침 및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16 이와 관련해서는 한정선, 「근대중국의 공화제 실험과 제국일본의 동요」, 『中國近現代史研究』 53집, 2012년 3월 참조.

간파한 것처럼,¹⁷ 일본 정계에서는 중국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고조가 당시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내각의 붕괴로 이어졌다. 사이온지 내각은 중국 정치 불안정을 이유로 육군 사단 2개 증설을 요구한 육군의 제안을 반대하였고, 이는 곧 육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내각이 총사직한 것이다. 이른바 ‘다이쇼정변’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정치변동이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사이온지 내각의 붕괴는 군부와 번벌세력과 결탁한 가쓰라 다로(桂太郎) 내각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가쓰라 내각의 수립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인식되었고, 다수당 정당이 내각을 수립하는 정당정치를 요구하는 운동이 세력을 얻게 되면서 제1차 호헌운동이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의 신흥 혁명은 일본 국내에서 다이쇼정변과 호헌운동을 촉발시켰고, 이에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정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동시에 일본 중앙 정계의 혼란은 대외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에서 중앙정부의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는 “다양한 준제국주의”(diversity of sub-imperialisms)가 경쟁하면서 작동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⁸ 이 과정에서 현실주의적, 권력정치적 아시아주의가 확장되었고, 패도주의적인 대외정책이 작동하였다. 군부의 육군 2개 사단 증설 요구가 일레라고 할 수 있다. 육군의 2개 사단 증설 요구는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 만주의 질서가 붕괴되는 경우”를 대비해 “약간의 병력을 증파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의 장래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시 육군 차관이었던 오카 이치노스케(岡市之助)는 밝히고 있다.¹⁹ 일본 육군의 ‘중국 전문가’(支那通)를 양성하는 참모본부 제2부의 부장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郎)는 서구 열강이 중국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몇 개의 “독립국”으로 분할하여, 때로는 이들 간의 경쟁을 조장하고 때로는 선택적으로 제휴함으로써 일본과 중국 사이에 “특수하고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서구의 중국 지배를 방지하는 동시에 일본의 대륙진출을 도

17 臼井勝美, 『中国と日本: 大正時代』, 原書房, 1972, 10쪽.

18 Beasley, *Japanese Imperialism*, p.104.

19 北岡伸一, 『日本陸軍と大陸政策 1906~1918』, 東京大學出版會, 1978, 93쪽에서 재인용.

모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²⁰ 중국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여 일본의 이권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강화하는 제안은 당시 북경 주재 공사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의 대응에서도 나타났다. 이주인 역시 남부의 혁명세력과 북방의 군벌세력으로 중국이 분할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러한 분할상태가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²¹ 이처럼 중국 정치 변혁기에 일본의 군부와 관계(官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개입하려는 정책과 제안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서구 열강과의 협조 속에서 일본의 이권과 안보를 확보하려는 정책과는 차이를 보이면서, 분할된 중국을 일본의 독점적인 영향권 안에 두고자 했다.

서구 열강의 협력적 제국주의로부터 독자성을 강조하는 일본 중국정책의 형성은 ‘대륙낭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민간의 아시아주의자가 군부, 관계, 그리고 재계에서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아시아주의적 현실주의와 현상유지적 현실주의가 공조를 이루면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 이에 기여한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인종주의에 기반한 불안감을 들 수 있다. 1898년부터 1900년까지 대장대신을 지낸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는 1914년경에 당시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 이후 세이유카이) 총재였던 하라 다카시(原敬)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중국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며,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면 각국은 반드시 중국을 향할 것이다. 아직 여유가 있는 요즘, 기회를 잃지 말고 위안스카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장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장래는 인종적 세계에서의 경쟁이 될 것이고 황색인종은 중국과 인도 정도뿐인데, 최근 그 세력이 점

20 北岡伸一, 『日本陸軍と大陸政策 1906~1918』, 94~95쪽 참조. 참모본부 제2부는 1896년 정보담당부서로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Kitaoka Shin'ichi, "China Experts in the Army," Peter Duus, et al. eds., *The Japanese Informal Empire in China, 1895~1937*,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참조.

21 櫻井良樹, 『辛亥革命と日本政治の變動』, 岩波書店, 2009, 32~35쪽. 이주인의 이러한 형세 판단은 대륙낭인의 한 명인 가와시마 나니와(川島浪速)와의 교류에서도 나타난다. Marius B. Jansen, *The Japanese and Sun Yat-se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p.137~140.

점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중국의 악감정을 일소하는 수단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²²

마쓰가타는 전후 국제관계에서 유색인종 제국으로서 일본이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인종적 세계”에서 일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연대가 필요하며, 특히 중국이 약체화된 기회를 활용하여 중국의 반일감정을 제거하며 연대를 도모함으로써 장래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대륙낭인 역시 유사한 논리로 중국과의 연대를 도모했다. 이들은 중국 남부의 혁명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혁명세력 지원을 통해 일본의 중국 진출을 도모했다.²³ 일례로 참모본부 제2부장 우쓰노미야는 미쓰비시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해혁명 시 공작자금”으로 1911년 11월부터 1912년 3월까지 “군 관계자에게 합계로 1만 엔, 대륙낭인에게는 약 3만 엔”을 지급하였다.²⁴ 신해혁명 후 중화민국을 수립한 쑨원은 임시대통령의 지위로 일본의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고쿠류카이(黑龍會)의 회장(會頭)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를 외교 고문으로 임명하였다.²⁵ 이처럼 대륙낭인을 연결 고리로 중국 남부 혁명세력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위안스카이의 외국인 고문 중 한 명이었던 조지 모리슨(George Ernest Morrison)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군부를 억제할 수는 없는가? 왜 일본 정부는 그들이 반란자와 함께하든 것을 허락하는가? 일본인들은 반란 세력과 중요한 계약들을 하였는데,

22 原敬, 『原敬日記 4』, 福村出版社, 1965, 1914/09/27, 49~50쪽. 하라 다카시는 이후 1918년 제19대 내각총리대신이 되었으나 1921년 피살되었다. 하라 다카시의 일기를 중심으로 그의 중국관과 조선관을 분석한 것으로 김영숙, 「근대 일본 정치가의 청국과 조선 시찰」, 『일본학보』 96, 2013년 8월 참조.

23 Marius B. Jansen, “Japan and the Chinese Revolution of 1911,” John K. Fairbank and Kwang-Ching Liu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2: Late Ch'ing, 1800~1911, part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참조.

24 櫻井良樹, 『辛亥革命と日本政治の變動』, 93~94쪽.

25 대륙낭인, 고쿠류카이, 그리고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상일, 『일본 제국주의의 한 연구: 대륙낭인과 대륙팽창』, 까치글방, 1977, 276쪽 외 참조.

그들은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²⁶

대륙낭인과 같은 아시아주의자들의 일본에서의 활동 영역은 군부, 관계, 재계에 제한되지 않았다. 이들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쌓은 인맥과 중국 정치에 대한 지식은 다이쇼 시대의 일본 학계 및 언론계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용되고 전파되었다. 다이쇼 시대 일본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지식인인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또한 이들을 통해 당시 중국 변혁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쌓았다.²⁷ 요시노는 1915년 ‘21개조 요구’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협상을 논의하는 『일중교섭론』(日支交渉論)을 발표하면서 언론계에 등장했다. 이후 1930년대 동아협동체론을 주장하면서 당시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내각의 대외정책 자문위원으로 활약한 로아마 마사미치(蠟山政道)는 『일중교섭론』을 “세계적 관점에서 일중관계를 분석한 뛰어난 작업”으로 평가하였다. 로아마는 이 책을 통해 요시노가 ‘중국 전문가’로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시사했다.²⁸ 중국에 대한 요시노의 진지한 관심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이른바 중국의 제3차 혁명(1916)을 전후해 형성되기 시작한 대륙낭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이었다. 요시노는 아래와 같이 회상했다.

나는 비록 졸업 후 곧 중국으로 갔으나, 텐진에 머물고 있던 많은 일본인들은 중국의 혁명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1916년 제3차 혁명이 발발했으나 중국에 관한 연구는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이 책(『33년간의 꿈』)에 대

26 Memorandum of 18 September 1913, item 142, G. E. Morrison Papers, 재인용, Ernest P. Young, “Chinese Leaders and Japanese Aid in the Early Republic,” Akira Iriye ed., *The Chinese and the Japanese: Essays in Political and Cultural Interactions*, New Hav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136.

27 요시노 사쿠조는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교수이고, 다이쇼 시대에 『中央公論』에 ‘민본주의’를 소개하는 「憲政の本義を説いてその有終の美を濟の途を論ず」(1916년 1월)과 「憲政の本義を説いて再び憲政有終の美を濟の途を論ず」(1917년 1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사도’로도 평가되는, 당시 사상계를 대표하는 자유주의 지식인의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요시노와 관련해서는, 松尾尊兌, 『大正デモクラシー』; 松本三之介, 『近代日本の政治と人間』, 創文社, 1966; 三谷太一郎, 『新版 大正デモクラシー論: 吉野作造の時代』, 東京大學出版會, 1995 참조. 요시노와 관련된 비교적 최근의 영문 연구서로는 Jung-Sun Han, *An Imperial Path to Modernity: Yoshino Sakuzo and a New Liberal Order in East Asia, 1905~193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Press, 2013 참조.

28 蠟山政道, 「我が師始吉野作造先生」, 『我が師を語る』, 社會思想研究會出版部, 1951, 158쪽.

해서 알지 못했다. 사실 나의 중국연구는 제3차 혁명을 전후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나 이 혁명이 발발한 지 몇 주 후에 당시 중국의 혁명에 동조한 도야마 미쓰루 옹, 데라오 선생 등이 혁명 정신을 우리나라에 보다 널리 알려야겠다고, 중국혁명사를 알기 쉽게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해 이 작업을 나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 당시 조금씩 중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나는 기쁘게 이 작업을 맡았다. 그리고 데라오 선생은 최근 자료의 공급자로 나에게 재천군(載天仇)군, 은여경(殷汝耕)군 등을 소개해준 것이다. 중국 혁명 초기의 역사를 아는데 가장 큰 참고서로서 알게 된 『33년간의 꿈』은 바로 이 둘에 의한 것이다.²⁹

요시노는 중국에 관한 초기 저술들의 상당한 부분을 『동방시론』(東方時論)에 발표했다. 이 잡지는 1916년에 히가시 노리마사(東則正, 1886~?)가 창간했다. 그는 와세다대학을 졸업했고 상하이(上海) 일본 상공회의소의 총서기를 지낸 인물이다.³⁰ 첫 호의 서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동방시론』은 일본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아시아 제일(주의)”를 요구하였다.³¹ 『동방시론』을 중심으로 동방회(東方會)라는 연구회가 결성되었는데, 그 회원은 재계, 군부

29 吉野作造, 『『三十三年の夢』 解題』, 『吉野作造選集 12』, 岩波書店, 1995, 314쪽. 『33년간의 꿈』은 미야자키 도라조(宮崎寅藏, 1871~1922)의 자서전이다. 그는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인물로서, 중국 혁명을 지원하는 데 일생을 바친 가장 중요한 아시아주의 활동가 중 한 사람이었다. 규슈의 구마모토 출신인 미야자키는 한때 도쿠토미의 학생이었다. 자서전은 처음에는 1902년에 『이륙신보』(二六新報)에 연재되었고, 같은 해 책의 형태로 출판되어 10쇄를 찍었다. 제2판은 1923년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메이지 문헌 보존 운동을 전개한 요시노가 중심이 된 기획의 일부분으로서 1926년에 나왔다. 이 판의 서문을 요시노가 썼다. 제3판은 1943년에 출간되었다. Marius B. Jansen, “Introduction: Miyazaki Tōten: The Dream and The Life,” in Miyazaki Tōten, *My Thirty-Three Years Dream: The Autobiography of Miyazaki Tōten*, Eto Shinkichi & Marius B. Jansen tra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참조.

30 곶이여 나가노 세이코(中野正剛, 1886~1943)가 1917년에 편집장으로 합류했고, 후에 잡지의 소유주가 된다. 그는 후쿠오카 출신으로서 대륙낭인의 대부 격인 도야마 미쓰루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 그도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고 히가시의 3년 후배였다. 후에 『동방시론』은 1923년의 관동대지진(關東大震災)에 의해 야기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 1860~1945)의 『日本及日本人』과 합병하여 1923년에 『아관』(我觀)으로 바뀌었다(猪俣敬太郎, 『中野正剛』, 吉川弘文館, 1960 참조).

31 『東方時論』 Vol.1, No.1, 1916년 9월, 1쪽.

(육군), 관료, 학계 및 언론계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³² 이 연구회는 요시노가 일본 내의 다른 중국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장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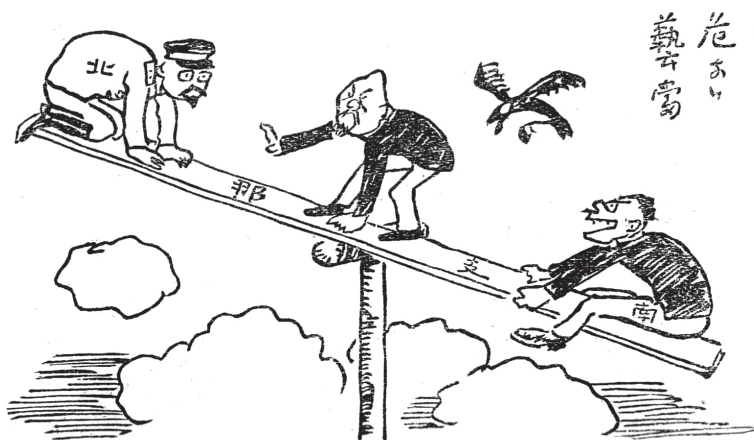
이처럼 대륙낭인과의 교류 속에서 저술된 『일중교섭론』은 민간의 아시아주의와 현실적 협조주의가 일시적으로 교차하면서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메이지유신 이래 추진해온 탈아입구(脫亜入歐)를 통해 서구 열강과 동등한 제국으로 성장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아시아문명에 뿌리를 둔 비서구 제국으로서의 고립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과 불안감은 중국에 대한 정책에서 패도주의로 표출된 것이다. 또한 유럽 전쟁을 계기로 중국에서 협력적 제국주의 세력이 일시 퇴조하는 상황은 패도주의가 급부상하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했다. 요시노 또한 이 기회를 포착하여 일본의 영향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시노는 일본의 확장이 다른 열강들의 이익과 충돌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열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중국 내의 지역들을 정리한 목록을 작성하기도 했다.³³ 더 나아가 그는 ‘21개조 요구’에 동의하면서, 일본의 요구는 “대체로 최소한의 것들이며, 일본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제5항의 삭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적고 있다.³⁴

요시노가 『제3혁명 후의 중국』(第三革命後の支那)을 작성하는 1917년에 이르면, 중국은 크게 남북으로 분열되어 남쪽에는 혁명세력, 북쪽에는 여러 군벌이 나타나서 권력을 다투게 된다. <그림 2>는 적극적으로 중국 내 분열에 개입하는 일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32 회원 중에는 재계 및 금융계의 야스카와 케이이치로(安川敬一郎, 1849~1934), 기무라 유지로(木村雄次郎, ?), 가네코 나오키치(金子直吉, 1866~1944), 다카기 리쿠로(高木陸朗, ?), 시로이와 류헤이(白岩龍平, ?), 다나베 벤키치(田邊弁吉, ?), 후지세 세이치로(藤瀬政二郎, ?), 에구치 데이조(江口定条, 1865~1946), 군부의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1876~1943),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1877~1966), 외무성의 고무라 긴이치(小村欣一, ?), 기무라 에이이치(木村英市, ?), 혼다 구마타로(本多熊太郎, 1870~1954), 대장성의 도미타 유타로(富田勇太郎, ?), 농무성의 이토 분키치(伊藤文吉, ?), 그리고 미야케 세쓰레이, 요시노 사쿠조, 나이토 고난(內藤湖南) 등과 같은 학계 및 언론계 출신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33 吉野作造, 「日支交渉論」, 『吉野作造選集 8』, 岩波書店, 1996, 146~148쪽.

34 吉野作造, 「日支交渉論」, 152쪽, 163쪽, 164쪽.



〈그림 2〉『日本及日本人』(1917/08/01)

『제3혁명 후의 중국』에서 요시노는 일본의 대중국 정책이 “외무 당국자와 육군 내지 원로”가 각각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육군 내지 원로”는 위안스카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을 지원하는데 이 접근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위안스카이는 “일본 배척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외국인 고문 조지 모리슨은 “선천적으로 일본을 싫어하는 자”(生來の日本嫌い)라는 것이다.³⁵ 요시노는 장래의 중국은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젊은 중국”(若き支那)이 중심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연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³⁶ 그러면서 요시노는 일본이 “젊은 중국”과 가지는 연대가 전후 영일관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오늘날 유럽전쟁의 결과, 전체로서 일본이 영국에 대해 가지는 지위가 매우 양

35 吉野作造, 「第三革命後の支那」, 『吉野作造選集 7』, 岩波書店, 1995, 160쪽.

36 吉野作造, 「第三革命後の支那」, 168쪽.

호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동양에서 우리 국가는 매우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지금이 일본과 영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좋은 기회이다. 종래에 중국에서의 이해문제에서, 우리 국가는 너무도 지나치게 영국에게 양보해 왔다고 생각한다. 무릇 중국에서 일본의 발전은 일본 존립을 위한 필요에 연원한다. 물러날 수 없는 일이다.³⁷

이처럼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에서 나타난 대외인식과 정체성은 서구 열강과 동등한 제국이라는 인식과 함께 유일하게 비기독교문명에 뿌리를 둔 아시아제국이라는 인식이 공존하면서 형성되었다. 세계로 팽창하는 일본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서구 열강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저변을 형성하였고, 이것은 ‘21개조 요구’와 같은 중국에 대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은 ‘21개조 요구’를 결코 “일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인식하지 않았고, 기존의 협력적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오만한” 행위로 받아들였다. 1915년 당시 주일대사로 도쿄에 체류하고 있던 코닝햄 그린 경(Sir Conyngham Greene)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일본인들은 야심적이고 자만심이 강하고, 가토 남작의 어구를 빌리자면, 오만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평양 지역의 지배자가 되는 데 열중해 있고, 그들의 눈은 전후처리에 고정되어 있다.”³⁸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참석 전권대사로 파견되는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는 1918년 12월 8일의 수상 관저에서 열린 제5회 외교조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제국의 이제까지의 행동을 볼 때, 어떤 때는 정의와 공정을 표방하고 어떤 때는 기회균등과 문호개방을 표명하고 내정불간섭과 일중 친선을 앞장서서 주장

37 吉野作造, 「第三革命後の支那」, 173~174쪽.

38 Greene to Grey, 1915/08/16, Naoko Shimazu, *Japan, Race and Equality: The Racial Equality Proposal of 1919*, London: Routledge, 1998, p.104에서 재인용.

하면서, 이것을 제국정부의 방침 내지 의견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종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열강이 일본을 불신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³⁹

3. 패도주의와 협조주의 사이에서, 1919~1926

국제사회에서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한 일본이 중국대륙과 태평양 지역으로 영토와 시장의 팽창을 추구하는 전간기는 동시에 세계사에서 군주제가 쓰러져가고, 식민지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사회주의가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와 경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입헌군주제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는 입헌군주제에 기반하고 제국주의에 뿌리를 둔 일본의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해혁명으로 공화정을 실험하던 ‘젊은 중국’(young China)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문호개방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일본의 위기감과 고립감은 더욱 깊어 갔다.

유동하는 국제정세와 지역정세에서 일본 제국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키라 이리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외교는 여전히 현실적이고 기회주의적이

39 伊東家文書, 小林龍夫 編, 『翠雨莊日記: 臨時外交調査委員會會議筆記等』, 原書房, 1966, 333쪽. 마키노 노부아키(1861~1946)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유럽을 방문하였고 미국에서 유학하였다. 1891년에 외무성에 들어간 후 외교관, 정치가로 성장하였다. 1918년 임시외교조사회가 구성될 때 위원이었고,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참석전권대사로 파견되었다. 1930년대 군부 세력이 확장될 때 ‘친영미 현상유지파’로 비난을 받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임시외교조사위원회는 1917년부터 1922년까지 당리당락을 초월한 외교정책 수립을 위해 존속한 천황 직속 기구였고, 외무성 및 원로와 함께 파리강화회의를 전후한 시기 일본의 외교정책을 결정한 3대 기구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며, 새로운 정세가 발생할 때마다 사태에 따라 정책을 세운다는 것, 전체적으로 통일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파악할 근본적 사상을 발생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취한 행동이 다른 여러 국가로부터 더더욱 새로운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해 일본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연쇄반응이 계속되었다.⁴⁰

위와 같은 일본의 대처와 파장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1919년 1월부터 열린 파리강화회의를 전후한 일본외교라고 할 수 있다. 제 1차 세계대전 전후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승전국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였을 때, 일본은 5대 강국 중 하나로 참석하였다. 1919년 평화회의는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요 승전국”으로서 전후질서 구축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나아가 전후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은 “승리 없는 평화와 대등한 평화”(a peace without victory, a peace among equals)를 주창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핵으로 하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설립과 이를 통해 국제분쟁을 관리하는 신질서를 구상하였다. 종래 국제관계의 규범이었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 권력정치를 통한 평화유지를 대신하여, 법과 규칙에 기반한 평화구축이라는 이상주의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⁴²

윌슨의 신질서 구상은 약육강식, 세력균형, 그리고 권력정치를 국제관계의 작동방식으로 인식하면서 제국주의 질서에 적응하여 강국으로 성장한 일본에는 매우 생소한 구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기에 획득한 중국과 태평양에서의 이권을 강화하는 전후처리로 파리평화회의에 접근한 일본 정부는 윌슨의 신질서를 일본을 구속할 수도 있는 질서로 인식했다. 이러한 신질서 구상에 대한 의구심은 일본이 국제연맹 설립을 통한 신질서 구축이

40 入江昭, 『日本の外交』, 64~65쪽.

41 G. John Ikenberry,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118.

42 G. John Ikenberry,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p.117, 124 참조.

파리평화회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했다. 일본 정부가 파리평화회의가 단순한 전후처리가 아닌, “민족자결주의”를 내포한 “대등한 평화” 그리고 “국제연맹”에 기초한 윌슨의 “14개조”가 신질서를 구축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한 것은 1918년 11월에 이르러서였다.⁴³ 이때는 일본에서는 세이유카이의 당수 하라 다카시에 의한 최초의 ‘평민내각’이 구성된 직후였고, 파리강화회의는 일본의 정당정치가 직면한 외교능력의 시금석 중 하나가 되었다.

당시 일본 국내여론은 윌슨의 이상주의에 기반한 신질서 구상에 회의적이었다. 예를 들면, 파리평화회의에 전권대사로 파견된 사이온지 긴모치의 수행원으로 동행한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는 「영미 중심의 평화주의를 배척한다」라는 글을 발표하였다.⁴⁴ 그는 이 글에서 영국과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는 “기성 강국”(已成の強國)이 “그들의 형편에 좋은 현상유지”에 편리한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는 “후발 강국”(未成の強國)으로서의 일본의 “정당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현상타파”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제질서는 “후진국을 영원히 선진국의 후배로 배격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어서 그는 영국과 미국이 “일약 경제적 세계 통일자”가 되는 것을 견제하고, “황인종과 백인종의 차별을 철폐”하는 일본 본위의 정의와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⁴⁵

그러나 새로 탄생한 하라 내각은 미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후 국제질서에서 차지하게 된 힘과 위상을 직시하였고, 미국이 주도하는 신질서 구축에 협조하는 것이 일본의 이권을 지키고 세력을 확장하는 데 필

43 Naoko Shimazu, *Japan, Race and Equality*: pp.44~45.

44 고노에 후미마로(1891~1945)는 1937~1939년, 1940~1941년에 걸쳐 수상을 역임했다. 패전 후 전범으로 지목되면서 자살했다. 그는 귀족원 의원이면서 아시아주의를 주창한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磨, 1863~1904)의 장남이기도 하다. 아쓰마로는 1898년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를 결성한 인물이다. 아쓰마로와 그의 아시아주의에 관해서는, Marius B. Jansen, “Konoe Atsumaro,” Akira Iriye ed., *The Chinese and the Japanese: Essays in Political and Cultural Interac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참조.

45 近衛文麿, 「英米本位の平和主義を排す」, 『日本及日本人』 746(1918/12/15), 23~26쪽 참조.

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라는 이미 오쿠마 내각의 중국에 대한 ‘21개조 요구’가 일본과 “가장 친밀해야 할 중국의 동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열강의 시기심이 깊어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에 대한 오쿠마 내각의 정책으로 인해 “일본은 장래 고립될 것”이라며 우려했다.⁴⁶ 특히 하라는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정책과 미일관계가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하라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장래 미국은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 데 이를 것이고, 중국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에 주목해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⁴⁷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중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정책을 취하면서 미국과 협조하고, 열국과의 협조 속에서 일본에 호의적인 통일된 정권이 중국에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⁴⁸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국제질서 속에서 협조주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영미 중심 국제질서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두 단계를 거쳐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5대 강국 중의 하나”로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국제관계 속 일본의 위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하라 총리는 1920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강화회의가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고, 일본은 5대국 중 하나로 세계평화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지위가 한층 굳건해진 것과 더불어, 세계에 대한 일본의 책임 또한 더욱더 무거워졌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의 정세는 더 이상 단독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국이 알고 있으나 타국이 알지 못하는 행동은 국가 사이에서 통용되는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실상을 볼 때도 도저히 용인되지 않는다. 즉 어떤 국가도 열국과의 협조를 유지하

46 原敬, 「第三十六回那帝國議會に於ける演説:對支外交に關する大隈内閣彈劾決議案説明」(1915/06/15), 原敬全集刊行會 編, 『原敬全集 下』, 原書房, 1969, 248쪽.

47 原敬, 『原敬日記 4』, 1917년 5월 27일.

48 川田稔, 『原敬と山縣有朋』, 中央公論社, 1998, 138쪽.

는 것을 필요로 하고, 일본 또한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⁴⁹

이와 같은 인식은 언론계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당시 일본 언론계를 대표하는 『중앙공론』(中央公論)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요시노 사쿠조에 의하면, “우리 일본은 이제 완전히 세계의 일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오늘 갑자기 세계의 일국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종래에는 세계 일반이 일본의 행동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일본 자신도 세계의 대세로부터 오로지 피동적인 입장에 있었다. 소위 세계적 의식이 희미하게나마 국민의 머리와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이번 전쟁부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세계 역시 전쟁 수해상 발생하는 필요에 따라, 서구의 문제에 일본의 힘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점점 세계적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발언을 인정하게 되는 단서가 열렸다.⁵⁰

요시노의 위와 같은 인식은 앞서 인용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도쿠토미의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도쿠토미의 일본은 양육강식의 국제관계 속에서 피동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시노의 일본은 “세계의 일국”으로서 발언하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다.

둘째로 일본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5대국의 일국’ 또는 ‘세계의 일국’이 되었다는 것은 국제관계의 변화가 일본제국의 국익과도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속감은 “세계의 큰 흐름”(大主潮)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그리고 국제질서에 “순응” 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곧 일본의 국익과도 일치한다는 인식으로 발전했다. 하라는

49 原敬, 「原首相の通牒」(1920/01), 川田稔, 『原敬と山県有朋』, 141쪽에서 재인용.

50 吉野作造, 「世界の大主潮と其順応策及対応策」, 『中央公論』(1919/01), 『吉野作造選集 6』, 岩波書店, 1996, 14쪽.

제42회 제국의회에서 아래와 같이 “대세 순응”(大勢に順応)이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대세에 순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세에 순응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열국 사이의 외교에서나 경제상의 영역에서도 여러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은 국제연맹의 정신에 기초해서 —어떤 국가에서도 단독으로 자국만의 의견을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협조를 이루어 열국협조로 영구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대세에 순응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⁵¹

하라의 대세순응론과 비교할 때, 요시노의 대세순응론은 더 적극적이다. 요시노는 “세계의 대세”는 “내국 정치에서는 민본주의를 철저히 하고, 대외 관계에서는 국제평등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⁵² 이 속에서 파리강화회의는 “세계개조”를 위한 것이고,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도, 또한 명의 국민으로서도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⁵³ 요시노의 이와 같은 인식은 동시에 매우 현실주의적으로 국제정치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이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를 포함한 14개조가 일본을 구속할 것으로 의심하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식민지 처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그럴듯하지만, 우리나라가 반드시 늘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51 原敬, 「第四十二回那帝國議會に於ける演説: 施政方針に關して高橋作衛に答う」(1920/01/23), 原敬全集刊行會編, 『原敬全集 下』, 320~321쪽.

52 吉野作造, 「世界の大主潮と其順応策及対応策」, 『中央公論』(1919/01), 『吉野作造選集 6』, 15쪽.

53 吉野作造, 「講和會議に對する國民の態度」, 『中央公論』(1919/03), 『吉野作造選集 6』, 33쪽.

요컨대 이번 강화회의에서 소위 민족의 문제에 관해, 민족자결주의를 해결의 근본 원칙으로 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민족자결주의가 러시아의 과격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의 모든 민족 문제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월슨이 이미 명언한 것과 같이 이번 전쟁에 직접 관계가 있는 민족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동맹국의 지배하에 있는 이민족에게 주로 적용될 것이다.⁵⁴

즉 민족자결주의는 연합국의 식민지 민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민족자결주의에 직접 구속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파리강화회의는 독일과 오토만제국이 보유한 식민지 문제만 다루었다. 월슨 역시 유럽의 전후질서 구축에만 집중하였고, 민족자결주의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면 그는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이 궁극적으로는 독립할 것이지만, 독립 과정은 “길이 깨끗이 닦여서, 토대가 주의 깊게 그리고 영구히 놓여지도록 꾸준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⁵⁵

파리강화회의가 보여 준 민족자결주의의 이상과 실행 사이의 불일치는 조선, 중국, 인도의 많은 민족주의자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고, 이것은 곧 아시아의 반제국주의 민족주의가 격화되는 데 촉매작용을 하였다.⁵⁶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열강은 결국 전시기에 일본이 중국에서 획득한 이권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에서 확고한 기반을 마

54 吉野作造, 「講和會議に提言すべき我國の南洋諸島処分案」, 『中央公論』 (1919/01), 『吉野作造選集 6』, 22~23쪽.

55 Woodrow Wilson, Annual Message to Congress, 1913/12/02. Erez Manela, *The Wilsonian Moment: Self-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 of Anticolonial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31에서 재인용.

56 Erez Manela, *The Wilsonian Moment*. 마넬라는 반제국주의 민족주의의 국제적 기원을 파리강화회의에서 찾으면서, 1920년대에 들어 활발해지는 아시아 민족주의는 일국사를 넘어 국제관계사적인 측면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나가타 아키히미 역시 조선의 3·1 운동의 전개와 한계를 국제사적인 측면에서 규명하면서, 민족자결주의가 3·1 운동에 끼친 영향과 파리강화회의의 전후의 미일관계가 일본의 조선 식민정책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나가타 아키히미, 박환무 옮김,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 조선독립운동과 미국, 1910~1922』, 일조각, 2008 참조.

련하고자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다른 이유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질서 구축에 깊은 의구심을 가졌다. 국제연맹규약에 ‘인종평등안’을 삽입하고자 한 일본의 제안이 부결된 사건이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이 안은 1918년 11월 19일 임시외교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1919년 2월 13일 국제연맹위원회에 차석전권대사 마키노에 의해 제출되었다.⁵⁷ 그 안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가 평등하다는 국제연맹의 기본 강령에 근거하여, 조약국은 연맹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일체의 외국인에 대해 균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할 것이며, 인종 또는 국적에 근거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어떤 차별도 하지 않을 것을 조속히 협약한다.⁵⁸

이 안은 영국, 프랑스 등의 반대로 만장일치를 이루어내지 못해 부결되었다. ‘인종평등안’이 국제연맹규약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주도하에서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신질서에 대해 일본이 깊은 불신을 갖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본이 당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종평등안’을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또한 당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구 열강 역시 일본이 보편적 가치로서 ‘인종평등’을 주장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인종평등안’을 제안한 과정을 재구성한 한 연구에 의하면, ‘인종평등안’이 지극히 국제권력정치의 구도 속에서 신흥 강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⁵⁹ 즉 5대 강국 중 유일한 유색인종 국가로 국제사회에 등장한 일본은 백색인종 국가들이 주

57 ‘racial equality proposal’로 알려지게 된 인종평등안은 일본에서는 ‘인종차별철폐안’으로 제안되었다. 이 안과 관련해서는, 池井優, 「パリ平和會議と人種差別撤廢問題」, 『國際政治』 23, 1963, 44~58쪽; Naoko Shimazu, *Japan, Race and Equality*; Margaret Macmillan, *Paris 1919: Six Months that Changed the World*, New York: Random House, 2003 참조.

58 영문안을 번역한 것으로, 영문안은 Margaret Macmillan, *Paris 1919*, pp.317~318 참조.

59 Naoko Shimazu, *Japan, Race and Equality*, pp.89~116.

도하는, 더 구체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이 구축하려는 전후질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에서 이 같은 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인종평등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한 1918년 11월 19일 열린 제3회 임시의료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회의는 특히 ‘미국 대통령 14개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회의인데,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국제연맹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서, 그 최종적 목적에 제국정부는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인종적 편견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현상을 고려할 때, 국제연맹의 목적 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제국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연맹 가입국과 미가입국 사이에서 과연 어떤 대우를 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제연맹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한 한 연기해 일반적인 희망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제도의 실행법은 각국의 숙제로 남겨두고, 새로이 실행되어야 할 안의 검토는 장래에 상당한 시기 동안 각국이 숙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제연맹이 조직될 경우 제국은 결국 연맹 밖에서 고립될 수는 없다. 만약 구체적인 제안이 성립되는 형세를 보는 데 이르게 되면, 인종적 편견에서 생기는 당국의 불리함을 제거할 방법을 상황이 허락하는 한 보장받도록 강구해야 할 것이다.⁶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유색인종 제국인 일본이 백색인종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인종적 편견”에 기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최대한 국제연맹 성립을 지연시키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맹이 성립될 경우, 일본은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일본에게 생길 수도 있을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인종차별철폐’를 제안하기로 한

60 「第三回 外交調査会會議筆記」, 伊織東家文書, 小林龍夫 編, 『翠雨莊日記: 臨時外交調査委員會會議筆記等』, 308쪽. Naoko Shimazu, *Japan, Race and Equality*, 특히 49쪽, 113쪽 참조.

것이다. 이처럼 자국 중심적인 동기에서 제안한 ‘인종평등안’은 일본 국내 여론의 관심을 모았고, 하라 총리로 상징되는 영미협조주의 외교정책에 비판적인 군부, 관계,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인종적 차별 철폐 기성 대회’ 등이 조직되어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요시노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면서 ‘인종평등안’의 “이기적” 동기를 꿰뚫고 있었다.

최근 민간의 일부 유지가들이 인종적 차별 철폐 운동을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결의에 기초한 선언서를 프랑스로 보내고 각국 위원에 보낸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곳저곳에서 연설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진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

그런데 이러한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은 이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 비추어 전개할 경우 발생할 무용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진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래에도 피해자가 이런 운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이치와 의로움에 맞는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지위에 부착된 이기적 동기에서 운동을 일으킨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처럼 이기적 동기에 기초해서 구미에 대한 역습을 하는 기술은 종래 우리나라에서 결코 적지 않게 사용되었다.⁶¹

“이기적 동기에 기초해서 구미에 대한 역습”을 시도한 ‘인종평등안’이 국제연맹협약에 삽입되는 것은 부결되었지만,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이권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하라 총리를 비롯한 당시의 외교정책 결정자들은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전후질서에서 고립될 수는 없다는 위기감으로부터 협조주의 외교노선을 따랐다. 1920년대 일본에서 지속된 협조주의 외교와 국제관계 속에서 확보한 실익에 근거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일본”을 출현하게 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즉 “신일본의 건설자

61 吉野作造, 「人種の差別撤運動者廢に与ふ」, 『中央公論』(1919/03), 『吉野作造選集 6』, 26~27쪽.

들”은 “일본 외교의 시야를 기존 아시아의 지도자의 그것에서부터 세계 5대 강국 중 일국의 그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⁶²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전간기 내내 일본 정부와 민간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아시아주의와 ‘인종평등안’으로 부각된 유색인종 제국으로서의 불안감을 간과하고 있으며, 중국 문제를 둘러싼 뿌리 깊은 아시아주의와 1920년대 영미협조주의의 복잡한 갈등과 경쟁관계를 간과한 지극히 단면적인 평가에 그친다.

하라 총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영미협조주의 외교는 그가 암살된 1921년 이후에는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1871~1951) 외상으로 이어졌다. 시데하라는 1924년부터 1927년까지, 그리고 1929년부터 1931년까지 두 번에 걸쳐 외무대신을 역임했는데, 전후 국제질서 틀 속에서 영미협조주의와 경제중심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했다. 그리고 시데하라의 경제중심주의 외교는 특히 일본의 중국과의 관계에 적용되었는데, 1920년대에 들어 중국과의 무역이 일본경제에서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⁶³ 시데하라는 일본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워 운송비 혜택을 보고 있고, 일본의 싼 임금 덕분에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이 우선 시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거대시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⁶⁴ 이처럼 1920년대 영미협조주의는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권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특히 중요했던 것이고, 이러한 영미협조주의는 중일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에서 추구하는 이권은 중국 내에서 반제국주의 민족주의가 고조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유지하기 힘들었다. 특히 파리강화회의에서 열강이 일본의 대중국 요구를 승인한 것은 “신질서”를 논의하지만 결국 열강 중심의 “협력적 제국주의”가 재구축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고, 이것은 5·4운동을 비롯해 중국 내의 반제국주의 시위와 폭동의 확산

62 Frederick R. Dickinson, *World War I and the Triumph of a New Japan, 1919~19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82.

63 Ian Nish, “An Overview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1895~1945,” *China Quarterly* 601, 1990, p.612.

64 W. G. Beasley, *Japanese Imperialism*, p.169에서 재인용.

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서 열강은 “개항장 조약체제”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관세 불평등’ 규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열강은 “중국 국내 정치의 불안정이 중앙정부의 약체화 때문이며, 중앙정부의 약체화는 재정의 파탄에서 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중국의 “정국이 불안정한 한 외국무역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⁶⁵ 따라서 중국의 중앙정부 재정건전화를 위해 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1925년에 북경관세회의를 열었다. 열강은 이러한 정책이 동시에 중국의 반제국주의 민족주의를 누그러뜨리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데하라를 외무대신으로 하는 일본 정부는 중국의 관세율 인상은 일본의 대중국 무역에 타격을 줄 것이며, 중국무역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그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고 보았기에 관세율 인상에 완고하게 반대했고, 결국 북경관세회의는 관세율 인상에 실패했다. 즉 일본이 중국에서 이권을 추구하는 지점에 이르자, “영미협조주의는 맥없이 붕괴하였고, 남은 것은 일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⁶⁶ 그러나 보다 정확한 시데하라의 외교에 대한 평가는 머리말에서 인용한 시노부 준페이의 동시대적 관찰일 것이다. 즉, “대세순응적 협조주의는 주로 유럽과 미국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이고, 이웃 중국에 대해서는 패도주의 색채가 여전히 농후했다”는 것이다.

4. 맺음말

시노부는 다이쇼 후기에 나타난 “대세순응주의”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그 이전부터 거의 전통적 신조”였다고 평가하면서, 메이지시기 이래 ‘협력적 제국주의’의 틀 속에서 일본의 안보와 이익을 확보해간 현상유지적

65 入江昭, 『日本の外交』, 95~96쪽.

66 入江昭, 『日本の外交』, 94~95쪽.

현실주의 노선의 연속성 속에 “대세순응주의”를 자리매김하고 있다.⁶⁷ 그러나 동시에 시노부는 “다이쇼 하반기 우리 외교상의 협조주의는 많은 경우 우리 쪽만의 양보를 의미한 협조에 만족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비판하며,⁶⁸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신외교’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추종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비판으로 미루어볼 때 시노부는 현직 외교관으로서 메이지시기의 현상유지적 현실주의를 체험하면서, ‘협력적 제국주의’의 유지 속에서만 일본의 권익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제국주의적 신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⁶⁹ 협력적 제국주의자 시노부의 미덕이라면, “다이쇼 시대의 국위 향상은 세계적 시운에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에서 찾을 수 있듯이, 그가 오만하지 않았던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는 다이쇼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대외정책은 협조주의와 패도주의 사이에서 모색되었는데, 그 목적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강화를 통해 배타적 이권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일본 국제외교정책의 저류를 형성하는 것은 요시노가 지적한 것처럼 “동양에서 매우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된” 것에서 기인한 오만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만함은 영국의 주일대사 그린 경이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당시 외상의 말을 빌리면서 인용한 것에 나타난 것처럼 서구 열강에도 전달되었다. 일본이 이 시기에 “동양에서 매우 우월한 지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에서의 세계대전을 계기로 생긴 아시아 내 힘의 공백과 신해혁명을 계기로 전개된 중국의 분열에서 기인하였다. 그러나 ‘동양에서의 매우 우월한 지위’는 이후 ‘동양’ 밖에서는 새로 실험되는 ‘신외교’의 흐름 속에서 고립되어 갔고, 안으로는 중국 민족주의의 도전을 받으면서 일본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갔다. 어쩌면 전시의 오만함

67 信夫淳平, 『大正外交十五年史』, 250쪽.

68 信夫淳平, 『大正外交十五年史』, 251쪽.

69 시노부는 이후 고무라 주타로 전기를 집필하였는데, 그것은 “일찍이 분명히 존재했던 일본 ‘고전 외교’ 실천자를 향한 얼마간의 노스텔지어를 담은 찬사였다”는 것이다. 사카이 데쓰야, 장인성 옮김, 『근대 일본의 국제질서』, 148쪽.

이 안팎으로 변하는 전후의 정세 속에서 불안감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함과 불안함 사이에서 일본 정부의 대중국정책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중국의 국내 정세가 남쪽의 혁명세력과 북쪽의 군벌세력 간의 경쟁으로 빠르게 전개되면서 중국의 어떤 세력과 어떤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일본의 대중국정책에 분열이 생겼고, 대중국정책의 분열은 영국과 미국이 구축하려는 전후질서에 대한 일본의 대외정책 분열을 가져왔다. 오만하면서 동시에 불안한 다이쇼 일본제국은 중국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중국문제는 이후 제국 붕괴의 초석이 되었다.